

참고

규제혁신 입법완료 과제 목록 (78개 법률)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1	산 중	벤처투자법 (대안, 2108617) 23.5.25	중기부	M&A 투자금 확보용 투자목적회사 설립 근거 신설 [기존] 벤처투자조합은 금융기관 자금차입이 불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 투자기업에 대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곤란 [개선] 대규모 투자 목적으로 M&A 벤처펀드의 재원으로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 설립 제도화
				M&A 펀드 상장법인 투자 제한 완화 [기존] 상장법인 투자제한(결성금액 20% 이내) 적용 [개선] 펀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M&A 펀드에 대해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(기존 20% → 60%로 완화) *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입법예고중 (~'23.10.2)
2	산 중	특허법 (☎홍정민, 2114081) 22.9.27	특허청	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 청구기간 연장 [기존] 과오납된 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는 국민의 신청에 의해 3년 이내에만 반환 청구 가능 [개선]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 청구기간(소멸시효)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추진
3	산 중	디자인보호법 (☎홍정민, 2114082) 22.9.27		
4	산 중	상표법 (☎홍정민, 2114080) 22.9.27		
5	산 중	디자인보호법 (위원장, 2122087) 23.5.25	특허청	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요건 완화 [기존] 신규성 상실의 예외* 주장은 '무효심판'에서만 가능하고, 권리범위 확인심판, 소송 단계에서는 불가능 * 디자인권 등록 요건으로 해당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라는 신규성이 있어야 하지만, 자기 공지, 의사에 반한 공지 등 예외 사유 존재 [개선] 모든 심판소송절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인정
				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[기존]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*을 위한 방법, 절차 등이 외국에 비해 제한되어 권리 보호에 어려움 존재 * 파리조약에 따라 A국에서 디자인권을 출원한 후,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B국에 출원하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, A국에서 먼저 출원한 날을 B국의 출원일자로 인정 [개선] 우선권 주장의 보정·추가 허용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한 우선권 주장기간 연장
6	복 지	마약류관리법 (☎김원이, 2102744)	식약처	의료용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폐지 [기존]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기 위해서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(㉔)서영석, 2118518) 23.7.18		<p>는 양도자의 관할 허가관청*의 승인을 받아야 함</p> <p>* 의료기관·약국→도매상 : 지자체 의료기관·약국·도매상→제약업체 : 지방청</p> <p>[개선]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을 원 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개선</p> <p>*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양도·양수 보고로도 반품 등 유통현황 파악 가능</p> <p>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절차 완화</p> <p>[기존] 자국내 적절한 대체치료가 없는 경우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약처 취급승인을 받아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, 절차가 복잡</p> <p>[개선]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를 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 면제</p>
7	복지	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(정부, 2118060) 23.5.25	식약처	<p>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</p> <p>[기존] 축산물은 수출 상대국이 국가 위생제도를 평가하여 허용한 제품에 한하여 수출 가능, 위생요건 이행 등 정부의 사후관리 필요</p> <p>[개선] 수입규제 대응 체계 강화, 수출 상대국 규제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, 수출 안전규제 지원 인프라 정비 통한 수출 활성화</p> <p>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</p> <p>[기존] 해외제조업소*의 현지 안전관리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수 수입업소 제도** 운영 중('09.8월~)이나, 해외작업장에서 축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우수 수입업소 등록 대상에서 제외</p> <p>*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, 식약처에서 현지 확인 후 등록 → 수입시 검사일부 생략 등 혜택 부여</p> <p>**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제조·가공 등을 하는 해외소재 작업장</p> <p>[개선] 해외작업장 위생관리를 점검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도 우수 수입업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</p>
8	복지	식품의약품검사법 (㉕)강기윤, 2117280) 23.5.25	식약처	<p>국내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</p> <p>[기존] 식품·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·검사기관의 경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나,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통해 국내 시험·검사 기관의 재 지정 평가 부담 완화 필요</p> <p>[개선] 국내 시험·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(3년→4년)</p>
9	복지	아동수당법	복지부	부모급여 제도 도입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지	(☎이종성, 2116957) 23.5.25		[기준] 영아수당 : 가정돌봄(30만원), 시설이용(50만원) 분리 지원 [개선] 생애 초기, 아동이 부모와 함께하여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부모급여 제도 도입·시행 * 가정돌봄, 시설이용 구분없이(23. 70만원 '24. 100만원) 통합 지원
10	농해수	수산생물질병관리법 (정부, 2119218) 23.5.25	해수부	수산생물질병 간이진단키트 도입 [기준] 수산생물질병 진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가 개발되었으나,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질병 관리 현장에서 사용 곤란 [개선]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간이진단키트의 정의를 신설하고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에 따라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및 수산생물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·이동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
11	농해수	스마트농업 육성법 ^{제정} (정부, 2118195) 23.6.30	농림부	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[기준]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자체 소유로 공유재산법상 부지의 장기임대·수의계약이 불가능하여 기존 농업인 참여가 제한 * 공유재산법상 최대 10년까지 임대 가능 [개선]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의 장기임대·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 부여 등
12	농해수	농수산물품질관리법 (☎이개호, 118582) 23.7.27	해수부	수산(어류)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허용 [기준] 지리적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가공품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'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제' 등록 시 *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된 농수산가공품으로 한정 [개선]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* 수산물(어류)의 특성(기후변화, 회유성)을 고려, '대상지역에서만 생산' → '국내에서 생산된 어류'로 '정의를 개정'
13	농해수	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정부, 2118208) 23.7.27	해수부	준보전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 및 공공시설 설치 허용 [기준] 건축물 설치, 낚시 활동과 같은 동식물의 채취·포획 행위금지 [개선] 낚시,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물 설치 허용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공공시설 및 소유자의 창고 시설 설치 허용 [기준]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 및 활동 허용 [개선] 가축사육, 공공시설물 및 소규모 창고시설 설치 허용
14	정무	국립묘지법 (정부, 2119644) 23.6.30	보훈부	시신·유골이 없는 순국선열 및 배우자 국립묘지 안장방법 개선 [기준]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사람을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 부부위패로 봉안하거나 충혼당에만 안치 가능 [개선] 유골·시신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에도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		<p>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순국선열 유족의 안장선택권 확대</p> <p>사망시점에 따라 안장여부가 달라지는 소방·경찰공무원 소급 안장</p> <p>[기존] 소방공무원이 1994년 9월 1일 이후에 화재진압, 인명구조 등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와, 경찰공무원이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만 현충원 안장가능</p> <p>[개선]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범위를 그 신분이 최초로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적용</p>
15	정무	참전유공자법 (정부, 2118681) 23.6.21	보훈부	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[기존] 6·25참전유공자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훈병원에서 진료 가능하나, 위탁병원은 75세 이상자만 진료 가능 [개선] 6·25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가능 기준연령(75세 이상) 폐지하여 근접진료 제고 및 의료비 부담 완화
16	정무	국가유공자법 (정부, 2118682) 23.6.21		6·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방식 개선 [기존]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성년 자녀에게 지급하는 예외적인 수당으로 선순위 자녀 1명만 지급하고 다른 자녀에게 수급권 이전 불가 [개선] 6·25전몰군경의 선순위 자녀 1인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동순위의 모든 자녀에게 균등분할 지급
17	정무	국가유공자법 (대안, 2118732) 22.12.08	보훈부	신체검사 간소화를 위한 장애진단서 도입 [기존]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병원 신체 검사 필수, 신검장소, 인원 등 신검체사가 제한 되어 등록결정에 장기간 소요 [개선] 상급종합병원,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의·의결
18	과방	전기통신사업법 (☎고민정, 119151) 23.6.30	과기부	지자체 자가망의 주민대상 공공서비스 활용 [기존]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되어,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은 내부 업무용 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음 * 교통, 환경, 안전, 보건, 교육, 관광, 시설물관리, 의료, 복지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 [개선]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하여, 자가망을 통해 공공Wi-Fi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충되고 국민들의 통신복지가 확대되도록 함
19	과방	정보통신공사업법 (☎김정호, 113701) 23.6.30	과기부	건축사에게만 허용하던 정보통신설비 설계·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에게도 허용 [기존]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·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

상임 위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	<p>설계 등 우려</p> <p>[개선] 정보통신공사 설계·감리를 기술사 등 정보통신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정보통신공사 설계·감리의 품질 제고</p>
20	<p>구직자취업촉진법 (정부, 2117318) 23.7.18</p>	고용부	<p>구직촉진수당 분할납부 및 총당 허용</p> <p>[기존]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오지급한 수당에 대해 반환 및 추가징수 시 일괄 납부만 가능</p> <p>[개선]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거나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을 이에 총당할 수 있도록 허용</p> <p>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지급정지 요건 개선</p> <p>[기존]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발생액(54.9만원) 초과 시 수당 지급정지 → 수급기간 중 생계유지, 일경험 등을 위한 소득활동 원천 제한</p> <p>[개선] 지급정지 기준금액 상향 및 소득 발생 수준에 따라 감액</p> <p>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선발형 청년특례적용 연령 확대</p> <p>[기존]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선발형(청년특례) 적용 연령이 18~34세로, 15~17세 구직자 제외</p> <p>[개선] 청년특례 연령 확대 추진(15~34세)</p> <p>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기간 개선</p> <p>[기존] 국취 참여 후 미취업종료자는 3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 → 사후관리기간 동안 취업한 자도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재참여 제한기간 적용</p> <p>[개선] 사후관리 기간에 취업한 자에 대해 취업자와 동일하게 재참여 제한기간 단축</p> <p>* 미취업자 3년 → 취업기간에 따라 제한기간 단축</p> <p>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유예신청 제한 개선</p> <p>[기존]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에 1회만 유예신청 가능</p> <p>[개선]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사유가 해소되는 필요한 기간에 횟수 제한 없이 유예신청 가능</p>
21	<p>환경보건법 (☹임이자, 117834) 23.7.27</p>	환경부	<p>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의 자발적 안전 관리 활성화를 위한 처벌규정 완화</p> <p>[기존]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*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을 제조·판매한 기업은 「환경보건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라, 형벌**에 처해짐</p> <p>* 프탈레이트 2종(DINP, DNOP), TBT, 노닐페놀 **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</p> <p>[개선] 어린이용품 제조 기업 등이 자발적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안전기준을 초과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조치하게 될 경우, 형벌 감면</p>
22	하도급법	공정위	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무	(대안, 2120964) 23.6.30		<p>[기존]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오를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</p> <p>[개선]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,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,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·수급사업자가 10%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</p> <p>납품단가 조정 관련 중기조합 대행 협상요건 완화</p> <p>[기존]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보완을 위한 '납품단가 조정협의 대행협상 제도'가 있으나, 신청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음</p> <p>[개선] 대행협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 또는 삭제</p>
23	국토	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(대안, 2120934) 23.3.30	국토부	<p>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형도면 고시 보완</p> <p>[기존]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형도면 고시 규정의 미비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의 경계, 지구지정의 절차상 흠결 가능성 및 별도의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 발생</p> <p>[개선]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할 경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절차상 흠결 보완</p>
24	정무	가맹사업법 (대안, 2123303) 23.7.18	공정위	<p>가맹계약서 교부받아 변호사 자문받을 시 숙고기간 단축</p> <p>[기존] 현행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숙고기간* 14일</p> <p>*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,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제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기간</p> <p>[개선]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</p>
25	환노	실내공기질관리법 (☎지성호, 118889) 23.8.24	환경부	<p>건축자재 오염물질 관리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</p> <p>[기존] 실내용 건축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 표지 부착의무가 있으나 단순 표지 미부착 사업자와 표지 무단사용 사업자를 동일하게 제재(과태료 최대 2천만원)</p> <p>[개선]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수준의 과태료 부과(최대 5백만원)</p>
26	산중	산업재해보상보험법 (☎김도읍, 113430) 23.7.18	고용부	<p>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범위 확대</p> <p>[기존]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25세 미만이나, 손자녀는 19세 미만으로 상이</p> <p>[개선] 손자녀의 경우에도 25세 미만으로 개선</p>

상임 위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27	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(대안, 2120241) 23.2.27	환경부	특정용도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시기 조정 [기존] 택배차·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대기관리권 역법 시행(23.4.3)에 앞서 대체차량(전기·LPG 등) 출시가 미흡 [개선] 관련 기관과의 8차례 간담회로 택배차·어린이통학차량 사용제한 시기를 대체차량 출시 시기*로 조정(24.1.1) * LPG 택배차 '23.12~, 전기 어린이통학차 '23. 하반기
28	자유무역지역법 (양이원영, 2114521) 22.10.27	산업부	자유무역지역 보세운송 신고 의무 위반 과실범 처벌 경감규정 조항 신설 [기존] 「관세법」에는 보세운송(무단보세운송) 의무위반에 대해 과실범의 경우 처벌을 경감하고 있으나, 「자유무역지역법」은 경감규정 없음 [개선] 「관세법」과 동일하게 과실범은 처벌을 경감할 수 있도록 「자유무역지역법」상 과실범 조항 신설
29	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(대안, 2121676) 23.4.27	중기부	1주 1의결권 원칙 완화, 복수의결권 도입 [기존] 1주당 의결권이 2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법에서 제한, 대규모 투자 유치시 창업주 경영권 상실 우려 *주주평등원칙에 따라 1주당 의결권은 1개 원칙 [개선] 투자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%이하로 하락하거나,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'복수의결권 주식' 발행 허용
30	약사법 (대안, 2120928) 23.3.30	복지부	공공심야약국 법제화 [기존]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중이며,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('22.7월~24.12월)을 통해 추가 설치 추진 예정 [개선]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,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및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
		식약처	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확대 [기존] 국내 승인된 임상시험용의약품만 치료목적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함 [개선] 국내·외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
31	도로교통법 (대안, 2120924)	경찰청	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(실외 이동로봇의 보도통행 조기 달성) [기존]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23.3.30		여, 보도·횡단보도 통행 제한 [개선]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개념 확대를 통해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※ 다부처 협력 필요과제
32	문체	게임산업법 (대안, 2120110) 23.2.27	문체부	청소년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금지 연령기준을 만19세로 통일 [기존] '음악산업법' 및 '게임산업법'과 '청소년보호법'의 '청소년 연령기준*'이 각각 상이하여 야간(밤 10시 이후) 노래방 및 PC방 출입제한 및 단속 혼란 초래 * ① '음악산업법'·'게임산업법' 기준 : 만18세 미만(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) ② '청소년보호법' 기준 : 만19세 미만(만19세가 되는 1월1일을 맞이하는 자 제외) [개선] 상이한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기준(만19세)으로 통일하도록 개선
33	산중	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법 (☎홍정민, 112822) 23.4.27	중기부	중소기업 사업 전환 인정범위 확대 [기존]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업종 자체의 전환·추가에 한정되어 동일 업종 내에서 품목 전환, 사업모델 혁신의 경우 지원 불가 [개선] 동일업종 내 유망 품목 전환,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범위 확대
34	교육	평생교육법 (대안, 2120935) 23.3.30	교육부	사내대학 설립·운영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[기존]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력(전문학사 또는 학사)이 인정되는 사내대학이 운영 중이나 엄격한 설립·운영 요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[개선] 설립요건(규모기준 등) 완화, 대학 위탁 운영 허용 및 입학자격 확대
35	환노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대안, 2120240) 23.2.27	환경부	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허용 및 지자체 구매 의무 부여 [기존] 재생원료는 원재료 대비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한계 [개선]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홍보 수단 및 공공조달에 따른 안정적 수요 확보
36	복지	생명윤리법 (대안, 2106073)	복지부	DTC 유전자검사 허용범위 확대 [기존] 비의료기관이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제공가능한 건강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20.12.02		<p>관련 유전자검사를 70개 항목으로 제한 (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)</p> <p>[개선] 인증제를 통해 개인 건강관리·웰니스 증진 관련 유전자검사 허용범위 확대(열거→신청)</p>
37	환 노	자원순환기본법 (대안, 2119184) 22.12.28	환경부	<p>순환자원 인정 활성화를 위한 지정·고시제도 도입</p> <p>[기존]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(18~)하고 있으나, 사업자별로 환경청장에게 순환자원 인정 신청시 인정·기준절차가 복잡하여 업계 부담</p> <p>[개선] 환경성·경제성이 높은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先 인정·고시하고, 後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</p> <hr/> <p>폐배터리 재활용 폐기물 규제 제외</p> <p>[기존] 폐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활발한 실증연구 등이 진행중이나,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어 민간시장 활성화에 제약* 발생</p> <p>* 매각/유통 수요 제약 및 보관기간 제약, 처리업 허가 의무 준수 등</p> <p>[개선] 순환자원으로 인정·고시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</p> <hr/> <p>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</p> <p>[기존] 자원순환 신기술·신산업이 각종 폐기물 규제(예 : 폐기물처리업 허가, 재활용 유형·기준)로 인해 활성화 애로*</p> <p>* 법령에 부재한 재활용 유형·방법을 허용하기 위해 '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'를 운영 중이나 평가·승인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며, 이후 법령 정비에는 최소 6개월 소요</p> <p>[개선]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의 실증·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(~22.12 목표)</p> <p>* ① 신속확인 : 규제 해당여부에 대해 30일내 통보 ② 일괄처리 : 2개 이상의 인·허가 필요시 일괄처리신청 ③ 실증특례 : 신제품·서비스의 시험·검증을 일정 조건하 허용 ④ 임시허가 :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용</p>
38	환 노	대기환경보전법 (대안, 2118757)	환경부	<p>전기동력 건설기계 보조금 확대</p> <p>[기존] 전기굴착기 신규 구매 시 구매보조금이 지속 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</p>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22.12.08		[개선]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(무)공해 건설기계 정의 신설 등 지속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
39	환노	하천법 (☎김회재, 115600) 22.12.08	환경부	하천구역내 반려동물 운동·휴식시설 허용 [기존] 가축의 방목·사육행위는 하천점용허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·휴식시설 설치에 제한 [개선] 「동물보호법」상 등록대상동물(개)을 위한 운동·휴식시설 설치에 하천점용허가 금지의 예외로서 허용
40	환노	자연공원법 (정부, 2102162) 22.11.24	환경부	자연공원법 허가 간주제 [기존]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징수허가를 받도록 규정 [개선]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허가여부 또는 연장여부를 통지토록 하고, 기한내 미허가(미연장)시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
				자연공원법 신고제도 합리화 [기존] 공원관리청에 신고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나, 처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[개선]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신고민원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 규정
41	환노	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(☎송옥주, 111209) 22.12.08	환경부	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[기존] 유기성 폐자원(음식물, 가축분뇨, 하수찌꺼기)은 에너지 잠재력이 크나 관련 제도 미비로 바이오가스 생산·활용 확대에 한계 [개선] 공공·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으로 관련 산업 육성, 기술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,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시장 조성 등
42	국토	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(☎이헌승, 114716) 22.10.27	국토부	무인등록비행장치 자격증명 모바일 증명 가능토록 개선 [기존] 조종자증명 4종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고 있어 소지 등에 불편 [개선] 모바일 신분증·운전면허 등과 같이 모바일 형식으로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		조종자증명 발급 개선
43	국 토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☎천준호, 2112170) 22.05.29	국토부	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공원계획결정 의제 개선 [기존]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시 각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신고·인가가 의제되나, 공원조성계획 결정만 누락되어 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한 별도 검토로 인한 사업 지연 [개선] 정비구역 내 도시공원 설치에 대한 의제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인가 받은 때 공원조성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
44	복 지	장애인활동지원법 (☎최연숙, 118265) 23.05.25	복지부	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급여 지원 방안 [기존]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 [개선]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 신청을 허용
45	복 지	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(☎서영석, 113685) 22.05.29	복지부	혁신형 제약산업 육성 지원기간 연장 [기존]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규정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 효력 유효기간 도래('22.3) [개선]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규정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 유효기간 연장('32년 3월 30일)
46	복 지	재난적의료비 지원법 (대안, 2120284) 23.2.27	복지부	비급여 희귀질환 의료기기 비용 지원 확대 [기존] 희귀질환을 진단·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등의 의료비 부담 증가 [개선]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'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'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
				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선 [기존]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목적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입원 또는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적용 *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		<p>[개선] 외래 지원 대상을 중증질환으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하여 입원, 외래 진료를 모두 지원</p> <p>※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(23. 12.)</p>
47	교육	<p>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(대안, 2120930) 23.3.30</p>	교육부	<p>학원 건물 내 복합유통게임제공업(PC방+휴게음식점) 설치 허용</p> <p>[기존] PC방과 휴게음식점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「학원법」상에 유해업소에 해당하여 학원 건물 내 설립 불허</p> <p>[개선] 「학원법」상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PC방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추가로 규정</p>
48	교육	<p>고등교육법 (대안, 2117545) 22.09.27</p>	교육부	<p>원격대학에 일반·전문대학원설치 허용</p> <p>[기존] 일반대학은 일반·전문·특수대학원을 모두 설치할 수 있으나, 원격대학은 오직 특수대학원만 설치 가능</p> <p>[개선] 원격대학(사이버대 및 방송대)에 일반·전문대학원(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) 설치 허용</p>
				<p>사이버대학 (2년제)에 전공심화과정 설치·운영 허용</p> <p>[기존] 전문대학은 '전공심화과정'*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나, 2년제 사이버대학은 불가</p> <p>[개선] 사이버대학 (2년제)에 전공심화과정 설치·운영 허용</p>
49	산기중	<p>발명진흥법 (대안, 2117941) 22.10.27</p>	특허청	<p>직무발명 관련 통지요건 완화</p> <p>[기존] 현행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여부 통지 수단을 '문서'로만 규정하고 있어, 이메일 등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</p> <p>[개선] 기업에서 직무발명 관련 업무 통지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문서의 범위에 '전자문서'를 포함</p>
50	전무	<p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(☎김병욱, 115301) 22.12.28</p>	금융위	<p>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인증수준</p> <p>[기존]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'23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 예정*</p> <p>*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,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</p> <p>[개선] 외부감사법 개정안(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</p>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		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)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('22.12.5)
51	산중	기술보증기금법 (☎김경만, 113440) 22.09.27	중기부	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[기존] 팩토링* 업무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규정 되어 있지 않아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서비스** 출시 불가 *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매출채권만기시 구매기업(매출채권 발행기업)으로부터 대금 회수 **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구매기업 지급불능시라도 판매기업에 대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 상품을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사업 추진 중('21.7월) [개선] 기술보증기금이 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안정적으로 조기에 현금화하는데 기여
52	산중	중소기업창업지원법 (☎정태호, 115480) 22.09.27	중기부	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일몰연장 [기존] 제조업 영위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(물이용 3년)간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농지보전 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중이나 '22.8월 일몰기한 도래 [개선] 7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한 일몰을 5년 연장('22.8월→'27.8월)
53	홍해수	수상레저안전법 (대안, 2115753) 22.05.29	해경청	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제출 서류 간소화 [기존]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시 신청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가입증명서를 직접 발급·제출해야함 [개선] 등록관청 담당자에 보험가입증명서 조회 권한 부여해 별도의 제출 절차 생략, 관련 규정 신설 및 소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
54	문체	문화예술진흥법 (대안, 2117269) 22.09.07	문체부	도서·문화 전용상품권 인증제도 폐지 [기존] 도서·문화 전용 상품권 발행시 자본금·상환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인증 필요 [개선] 사문화된 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인증 절차 폐지
55	문체	영화비디오물진흥법 (대안, 2117270) 22.09.07	문체부	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[기존] 영상물(영화, 비디오물 등)을 유료로 제공하기 전,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* (처리기한) 영화 10일, 비디오물 14일, 예고편 영화 7일 등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		[개선] OTT(지정사업자)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(즉시)
56	농 해 수	양식산업발전법 (대안, 2118764) 22.12.08	해수부	개인·어촌계 등 소유 양식면허의 공공기관 임차 및 재임대 허용 [기존]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일반인이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더라도 어촌계 폐쇄성*, 막대한 자본 소요**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한계, 현황어업인 위주의 폐쇄적 양식면허 운영으로 인한 진입장벽 제거 필요 * 전체 양식 면적 중 85.8%에 달하는 어촌계·수협 양식장은 해당 어촌계원과 조합원에게 임대 ** 양식면허 추정 매매가격(평균면적) : 어류 5.6억원,패류 6억원, 해조류 3억원 [개선] 귀어·귀촌 활성화, 어업인 후계자 육성 등 신규인력의 양식업 진입을 위해 공공기관 자체 양식장 운영
57	정 무	개인정보보호법 (대안, 2120089) 23.02.27	개보위	개인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[기존] 이동형 영상촬영기기(자율주행차, 드론, 로봇 VR.AR 등)에 의한 촬영기준 부재(녹화, 동의절차, 정보수집 및 활용 등) [개선] 촬영사실 표시,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촬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 완료 개인정보 분리보관 의무 폐지 [기존]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보관 의무화 [개선]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보관 의무조항 삭제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 일원화 [기존]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일반 규정보다 엄격한 정보유출 신고·통지의무 부과(24시간 내) [개선]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유출 신고·통지의무 완화(5일 이내)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 다양화 [기존] 정보주체 동의시에만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가능 [개선] 정보주체 동의 외 인증, 표준계약 등 허용요건 확대 방송사업자의 특례 폐지 [기존] 정보통신망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적용을 확대하였으나, 개인정보보호법 통합시에 특례규정으로 이관되면서 법 적용 범위 불분명 [개선] 방송사업자 등의 특례 조항 삭제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확대 [기존]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마이

상임 위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	<p>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정보를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포괄적*으로 규정</p> <p>* 전송요청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 범위에 금융업권별 주요 금융정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포함</p> <p>- 이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범위는 관련 업권이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TF를 통해 업권 간 협의 등을 거쳐 결정</p> <p>[개선] 민간에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해 정보제공 범위 확대</p> <p>* 전산개발 부담 등으로 금융권 정보 일부 제외 → 가이드라인 개정 통해 포함 필요</p> <p>** 非금융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에 도입 근거 마련 필요, 현재 관련하여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(정부발의, '21.9~)</p>
			<p>AR, AI 기술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</p> <p>[기존] 드론을 활용한 가스배관 점검 규정 부재(도시가스사업법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한(개인정보보호법), 개인 위치정보 수집·이용 제한(위치정보보호법) 등</p> <p>[개선] 촬영사실 표시,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촬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 완료 ※ 도시가스사업법,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은 소관부처에서 검토</p>
			<p>실외 이동로봇 개인정보 수집·이용 허용</p> <p>[기존] 로봇·드론 등 자율이동체의 경우, 이동 시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 정보 주체의 개별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불가</p> <p>[개선]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경우 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, 안전조치 시 촬영이 가능하도록 처리 근거 신설</p>
			<p>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</p> <p>[기존] 자율주행 로봇은 보도·횡단보도 등에서 통행 제한(도로교통법), 30kg 이상시 공원내 출입 및 주행 불가(공원녹지법 시행령),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사전 동의 곤란(개인정보보호법) 등</p> <p>[개선]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'차' 분류 예외사항에 자율주행 로봇 추가, 60kg 미만 로봇의 공원내 출입 허용,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마련 및 자율주행 로봇의 영상 촬영 허용</p>
			<p>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 통지제도 정비</p> <p>[기존] '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'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사업자(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)를 대상으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</p> <p>[개선] 온라인·오프라인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을 '개인정보처리자'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혼란 해소</p> <p>- 정보주체에게 '이용·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접속방법'을 안내할 수 있도록 통지 방식을 다양화하고, 시행</p>

상임 위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	령에서 통지 대상의 범위 및 주기,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드론 규제 개선 [기존] 도심내 드론 비행규정 불명확, 군 관할구역내 비행승인시 최대 1개월 이내 승인(국방부 업무지침), 드론을 활용한 열공급시설 점검 불가(산업부 고시),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정 부재(개인정보보호법) [개선] 도심내 드론비행 가이드라인 마련, 군 관할구역내 비행승인시 최대 6개월로 연장, 드론을 활용한 열공급시설 점검 규정 추가,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영상촬영 허용
58	산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대안, 2115766) 22.05.29	산업부	수소산업 등의 범위 확대 [기존] '수소가스터빈발전'은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원임에도 '수소산업'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 [개선] 관련법상 '정의' 조항 중 '수소산업' 조항과 '수소연료 공급 및 사용 시설' 조항에 수소가스터빈 발전을 추가 수소운송 수소엔진 상용화 지원 [기존] 수소법에 연료전지 외에 다양한 산업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필요 - 특히, '수소산업'의 정의에 '수소엔진'을 추가하여 수소엔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[개선] 수소법 개정안에는 연료전지,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를 '수소산업'이라 정의
59	산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(대안, 2117565) 22.09.27	산업부	ESS 규정완화 및 사용후배터리 인증 [기존] 기존 대비 화재 안전성이 높아지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 [개선] ESS 배터리 종류별, 사용용도별 안전기준을 세분화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 개정 추진,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
60	과방 우주개발진흥법 (대안, 2115731) 22.05.29	과기부	국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·활용 [기존] 우주환경 모사시험시설 등 국가 우주기반시설의 민간 개방 근거 부재, 민간 우주산업체가 우주제품 개발 등에 국가시설 활용 불가 [개선] 공기업, 출연(연) 등 공공기관의 우주기반시설을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활성화 촉진
61	농해 동물보호법	농림부	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수	(대안, 2115073) 22.04.05		[기존] 반려동물 행동지도·훈련 등에 관한 자격이 민간에서 제각기 운영,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안전사고·소음 등 사회적 갈등도 함께 증가하여 관련 자격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자격제 필요 [개선]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자격·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자격제도 법적 근거 마련
62	산중	산업발전법 (☞권명호, 111001) 22.05.29	산업부	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절차 보완 [기존]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으므로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[개선]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
63	기재	영농상속공제 및 증여세법 (정부, 2117152) 22.12.23	농림부	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[기존]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20억원으로 규정 [개선]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여 영농승계 촉진 활성화
64	농해수	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(대안, 2117567) 22.09.27	농림부	17~19 직불금 1회 지급실적 요건 삭제 [기존] 공익직불금 개편 당시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 과거('17~'19년) 직불금 수령실적을 추가 [개선]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'17~ '19년 직불금 1회 이상 지급실적 요건 삭제
65	과방	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(조승래, 2110151) 22.05.29	과기부	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제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[기존]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과제의 경우 유효기간(2+2년) 만료 시 사업 중단 우려 [개선] 안전성 입증완료 과제의 법령정비 의무화 및 임시허가 전환(2+2년+임시허가)
66	과방	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(대안, 2120228)	과기부	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[기존]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신청대상이 제한적이고 타분야 규제샌드박스과 달리 신속확인·임시허가 제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	23.02.27		<p>도 부재</p> <p>[개선] 실증특례 신청가능 기업 확대* 및 신속확·임시허가제 신규 도입 등 제도 보완</p> <p>* (현황)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공공기술을 실증하는 특구기업 → (개선) 모든 특구기업</p>
67	산 중	지방세특례제한법 (대안, 2120249) 23.02.27	중기부	<p>벤처기업 투자확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 유도 등을 통한 촉진지구 활성화</p> <p>[기존]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(지역)와 벤처기업 집적시설(건축물) 입주 벤처기업의 입지 비용부담 완화</p> <p>[개선]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간(~22.12)을 3년 연장하고, 벤처기업이 지구 내 추가 투자시 부담금 감면 확대 및 법인세 감면*</p> <p>* 기재부 협의 필요(지방세특례제한법, 조특법 개정)</p>
68	산 중	벤처투자법 (☎권명호, 119414) 23.08.24	중기부	<p>주식처분 미이행에 대한 형벌규정 완화 (경제형벌 1차)</p> <p>[기존]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대주주가 된 경우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 형벌 부과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</p> <p>[개선] 과태료 (3천만원 이하)로 제재수준 전환</p>
69	산 중	특허법 (☎이장섭, 118322) 23.08.24	특허청	<p>심판청구 중 발생하는 경미한 오류에 대한 심판장 직권보정 제도 도입</p> <p>[기존] 산업재산권 심판청구 시 명백하고 경미한 오류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는 방식으로만 흡결 치유가 가능하며, 사소한 실수의 통지와 보정 과정에서 심판 절차가 지연</p> <p>* 행정심판법의 경우 심판청구의 경미한 사항을 직권 보정 가능</p> <p>[개선] 심판청구 중 발생한 이름, 특허번호 오·탈자 등의 경미하고 명확한 오류는 직권 보정이 가능하도록 개선</p>
70	산 중	디자인보호법 (☎이장섭, 118316) 23.08.24		
71	산 중	상표법 (☎이장섭, 118321) 23.08.24		
72	환 노	구직자취업촉진법 (박대수, 2118898) 23.07.18	고용부	<p>청년 연령 계산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제외</p> <p>[기존] 청년(18~34세) 한하여 중위소득 120%인 자까지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완화(1유형 청년특례) 하여 지원하고 있으나, 병역 의무 이행기간 관계없이 청년 여부 판단</p> <p>[개선] 청년 수급요건 판단시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하여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</p>
73	농 해	항만법 (☎안병길, 	해수부	<p>항만배후단지 국유재산 사용 특례기간 확대</p> <p>[기존]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에</p>

상임 위		법안명	주관 부처	주요내용
	수	2119230)		대하여 20년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가 가능 [개선]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30년으로 특례 확대
		23.10.06		항만건설 신기술 시장진입 제한 혁신 [기존] 해양수산신기술 및 혁신제품의 경우 우대사항이 달라 신기술 및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참여도가 낮고 기업의 개선 요구가 많음 [개선] 신기술 및 신산업 활용을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손실 면책 등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
74	농해수	한국해양진흥공사법 (㉔안병길, 2118874) 23.10.06 * 국정과제 공통법안	해수부	선박연료공급업 현장어로 해소 [기존] 선박연료 정량공급 등 품질관리 시스템 부재로 면세유 불법유통 및 공급량 분쟁 만연, 국내 선박연료공급선의 소형 노후로 인해 경쟁력 부족 [개선]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마련, 대형 연료공급선 건조 지원을 위한 채무보증 제도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업종 확대 [기존]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조는 해운항만법의 정의를 해운업과 항만운송업만 규정하여 해양진흥공사는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만 가능 [개선] 해운항만업 정의 규정에 항만개발 및 항만운송관련 산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여 지원근거 마련
75	산중	상표법 (대안, DD11315) 23.10.06	특허청	상표 공존동의제 도입 [기존] 타인의 동일·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음 [개선]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고 출처의 오인·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
76	농해수	원양산업발전법 (정부, 2118932) 23.10.06	해수부	어획물을 실은 선박의 입항 신고기한 완화 [기존]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 입항할 때 48시간 전에 입항신고 [개선] 입항 신고기한을 입항 48시간 전에서 입항 24시간 전으로 완화
77	환노	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(㉔임이자, 2117109) 23.10.06 * 국정과제 공통법안	기상청	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개선 [기존] 기후변화 추세 예측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제도 운영 [개선] 인증의 기준이 시나리오가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'인증'이 아닌 '승인'의 형태로 개선
78	정무	보험업법 (대안, DD11306) 23.10.06	금융위	실손보험청구간소화 [기존] 실손보험은 4,000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나, 소액의 경우에도 청구절차가 복잡해 소비자(보험가입자) 불편 지속 [개선] 소비자들이 실손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절차 간소화(요양기관-보험사 연계 등)